

# 민주 지도부, '尹정부 책임론, 정치 탄압' 파상공세

### “예산 처리 원안 고집, 민생 나 몰라라” 용산 이전, 부·울·경 메가시티 등 지적도 檢 수사 반발...이재명, 직접 “연출 낙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내년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윤석열정권의 정치 탄압론을 내세워 대정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년 예산안 협의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설명하고 “왜곡해 정쟁 도구로 삼는 정부여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언급하고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강경책을 통해 작은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순 있을지 몰라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 초과를 상기고 “여당은 초보자 감세 정부 원안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나 몰라라”며 “원내대표가 참여한 협상마저 정부 고집에 꼭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초보자 감세 철회, 위법적·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어르신, 청년,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약 차주, 농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걸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며 “지위가 높다고 책임에서 빠져나가게 용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청와대 활용 문제를 언급하고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국민 초청

때마다 장소가 바뀌면서, 장소를 꾸미기 위한 예산이 낭비되고 경호 인력이 낭비되며 국민 불편도 더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용산 이전의 명분으로 삼았던 국민 소통은 석열가벽 불통으로 마무리 됐고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청와대는 부분 개방으로 이어진다”며 “대통령실 이전이 졸속 추진됐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보란 듯 관저로 불러 만찬했다. 이 장관을 보란 듯 지킨다”고 규탄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언급하고 “윤 대통령은 부울경에서 대선, 지선 표만 쏙 빼먹고 부·울·경 메가시티 좌초는 모른 척 한다”며 “윤 대통령 동의 없이 단체장들이 어떻게 메가시티를 버릴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선 “노조 파업이 북핵 위협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노조를 이적 단체로 매도했다”며 “정치 검사 본능을 버리지 못하면 윤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가 불행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상대 수사에 대한 반발 주장도 쏟아냈다. 이 대표가 직접 검찰 수사에 대해 “연출 능력 낙제”란 언급을 하는가 하면, 수사 공정성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렸다.

먼저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포



정치’ 등을 언급하고 “사정기관들이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 변호사를 거론하고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으며 “목표를 정해 놓고 조조해 정치 보복,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건 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남 변호사 재판 발언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신빙성을 훼손한다”며 “한 쪽에는 추측과 전언만 있고 한 쪽에는 명백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이 진행되면서 신빙성 없는 진술은 잇따라 탄핵 당하게 될 것”이라며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국민들 귀와 눈을 가리고 표적 수사로 죄를 만들어 내려 한 검찰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누군가 계속 수사만

할 게 아니라 집안 관리부터 하라”며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을 호명하고 과거 불거졌던 남북 접촉 문제 적절성을 들여다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 나토 순방 시 민간인 동행 논란을 상기고 “당시 행사 기획을 담당했다고 했지만, 의전 소속이 아닌 영부인을 수행하는 부속실 소속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이것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면서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추가조작 공소시효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재판 관련 내용이라는 취지 발언을 전개하면서 “검찰이 소환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 추가조작 권력이 뭐 그리 두렵나”라며 “주저 없이 수사에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최이슬 기자



### 민주 “김건희 공소시효 만료...檢은 눈감고 입단야”

###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가” 지적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도 검찰은 이에 관해선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권력 앞에서는 춘풍 같고 약자 앞에서는 추상같은 검찰에 묻는다. 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리며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공범이라는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수 없이 드러났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으니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추가조작 선수 이모씨의 범행 종료일인 오늘,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전히 사실을 외면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냈다.

박 대변인은 “권력 앞에서는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는 검찰의 과거 작태를 재연하려는 것인가. 하지만 진실규명을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 전문가 임원이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지지부진했던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 검찰이 김 여사를 추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면 공소시효는 권 회장과 피고인들의 확정판결 시점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화 녹취록, 거래 기록 등 재판과정에서 증거는 다 나왔다. 검찰의 판단만 있으면 된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하면 재판 확정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짜주기’, ‘눈감기’ 수사로도 부족해 공소시효 핑계를 대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몽땅 수는 없다. 아직 검찰 안에 정의와 공정을 아는 검사가 남아있다고 믿는다. 검찰은 권력자의 범죄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얼어붙은 수사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선욱 기자

##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결정...“거부시 탄핵소추”

### “지도부에서 설명...전체 의원이 동의”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에서)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설명드렸고 전체 의원이 동의 해줬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 반대 의견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는 “따로 개별 발언이나 의견을 표명한 의원들이 없었다”고 했다.

또 “해임건의안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며 “해임건의안과 상관없이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그게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이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3+3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의원총회 이후에도 계속 진행

할 예정이지만 아직 매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단독 수정안은 감액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며 “협상에서 신의성실하게 여야가 논의를 잘 이어간다면 이번 8일, 9일 본회의 때 안건 상정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수정안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이후의 임시국회 계획에 대해서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여러 않아 타위법이라든지 제대로 상정되지 않아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는 등 많은 타격이 있지 않나”고 설명했다.

김재환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